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20점)

물음2)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경우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20점)

[물음1]

I. 서(론)

현장조사 과정에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처분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주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외사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사유이다.

Ⅲ.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23년 9/3 (모의고사 1번문제 출제: 가평소방서장 판례)

(1) 판례에 따르면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하였다.

(2)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음2]

I. 서(론)

현장조사 과정에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처분의 의견제출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주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의견제출

1. 의의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Ⅲ.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23년 9/3 (모의고사 1번문제 출제: 가평소방서장 판례)

(1) 판례에 따르면 “ 현장조사 당시 위반경위에 관하여 甲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전통지기간인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때 A시장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20점)

I. 서

행정청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가 부분공개 가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부분공개 : 7/8, 9월 전국(모의고사 출제)

1. 요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②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③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2. 검토

업무추진비에 관한 ‘공개대상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乙의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반하는 않는다면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III. 결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에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乙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 甲의 공개청구에 대해 A시장의 전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3]

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I. 허가의 취소 등 (8회 기출, 핵심목차노트 P47 7번문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II. 주무관청에의 요구 (책 P244, 15번 문제)

- ①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B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인 A행정청에 대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B행정청은 주무관청인 A행정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 ③ B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인 A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제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I.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요구 사유(7조의3) : 8/5(모의고사 출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②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II.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자(7조의4) : 8/5(모의고사 출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